

전남농민, 도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발끈

대상 농가 경영주로 한정 · 공익수당심의위 금액 결정

농민회 · 민주당 “전남도 안보다 후퇴”...재심의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 향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하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전남도의회에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전남도 안과 정의당이 보미라 의원이 발의한 도의회안, 농민단체의 주민청구발의안 등 3개의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농가)에 한 해 연 60만원 지급’이며, 이보라미 의원 조례안은 ‘모든 농민에 연간 12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농민단체가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모든 농민에 연간 120만원 지급’과 함께 어민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발의된 3개의 조례안을 통합 심의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가장 좁은 의미의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제한하고, 다름이 있는 지급 금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책임을 비켜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민주당 전남도당 등 6개 단체 회원 700여명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 어민수당 조례제정 촉구 전남도민대회를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도의회를 압박해 왔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농민단체에서 지급대상으로 주장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축소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만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 확대마저도 담아버렸다”며 조례안 재심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서에서 “농민과 도민들이 정성들여

만든 농민수당 조례안을 폐기한 것은 도민의 뜻을 꺾어준 것과 같다”며 “앞으로 농이민단체 및 전남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건, 어업은 2만3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 예산만 1458억원이 든다.

이를 모든 농업업인으로 확대하

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예산도 연간 417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성일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수당을 주민 청구안대로 농어민 전체에 지급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재정 여건이 될 때 도지사 권한으로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연 승자는? 22일 오전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열린 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구급차 3인 탑승률 39.5%p ↑...112 현장대응시간 57초 단축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찰, 소방, 안전 등 현장공무원 인력을 꾸준히 충원한 결과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증가하고 112 현장대응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현장필수인력 충원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상반기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품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말까지 5100명이 충원된 소방의 경우 큰 효과를 봤다.

구급차 3인 탑승률이 2016년 31.7%에서 올 상반기 71.2%로 39.5%p 상승했다.

김급이송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평가 및 의사처사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1명 외에 전문응급인력 2명이 탑승

해야 했지만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3인 탑승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계속 충원되면서 지난해 3인 탑승률이 63.8%를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아울러 소방 인력이 늘어나면서 단독출동 및 단독화재 진화하는 ‘1인 지역대(나홀로 소방대)’를 해소했다.

나홀로 소방대는 2016년 57개소였는데, 서서히 줄어 지난해 14개소, 올해는 0개소로 완전히 사라졌다.

4000여 명이 충원된 경찰청의 경우에도 현장대응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실제 112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이 2016년 6분51초에서 2019년 상반기 5분54초로 57초가 단축(13.9%p↓)돼 위험상황에 신속하

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의 발생건수는 2016년 53만6000건에서 지난해 48만9000건으로 줄었고,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검거율은 3.1%p 높아졌다.

4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2016년 76.1%에서 지난해 77.1%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79.2%를 기록했다.

1400여명이 충원된 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확충(2016년 305개→2019년 6월 403개)되고 단·병설 학급수도 확충(2016년 9103개→2019년 6월 1만613개)되면서 교사 1인당 유아수도 줄었다. 2016년 18.4명에서 지난해 15.9명, 올 6월 기준 15.5명으로 15.8%p가 감소했다.

뉴스1

연말부터 금융업무 ‘전자증명서’로 대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김성일 행정안전부 23일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

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에 앞서 실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문서 지급 배포 방식을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뉴스1



이슈 판결

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택시기사... 法 “산재”

“고의의 자해행위 · 범죄행위 · 사적행위 아냐”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행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택시회사 측은 “일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와의 충돌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씨의 배우자 유모씨는 “일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는 택시운행 업무가 아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로 생긴 교통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서 택시를 주차한 뒤 비상등을 켜둔 채 차량으로 향했고, 사고까지 약 5~7분 가량 소요됐다”며 “김씨는 택시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장소가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당시 버스 속도는 약 27km/h였음에도 버스기사가 시장 골목 앞에 무단주차해 있던 택치에 시야가 가려 김씨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김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씨의 행위가 산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고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 조기 발견, 자라치로고로 영민 인허군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장애선형기 건강검진

구급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